

민생은 암초 투성인데... 여야 힘겨루며 日 대응 '뒷전'

日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8월 중순 마지막 회의 '유명무실' 정기국회 첫 발도 못때고 파행 '조국 대선' 몰두에 국민 질타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영 국회의장이 사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기국회 파행은 물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목소리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경기 악화가 심화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18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이나 항방에 대한 정치권의 발표는 전혀 없었다. 이해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각별히 대처해야 할 것 같다"

고 원론적인 말만 남겼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경우 이날도 조 장관 퇴진과 여권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다.

현재 국내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이 무인기 폭격을 받으면서 나라에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산업계는 사우디 원유시설 공습으로 하루 1000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멈추면서 세계 원유공급량 기준 5%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가 최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 수출량은 2017년 기준 968억2000만달러로 반도체 다음으로 많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연이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약제가 겹치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

응은 상당히 미지근하다.

여당은 앞서 일본의 한국 압박을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전면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9월에 들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도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만 회의 결과를 종종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도 정진석 의원을 필두로 한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지난달 초 이후 주목할 만한 행보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른바 '사발 릴레이'로 '조국 정국'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온다.

초당적 대응을 위해 7월 말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도 지난달 14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조직으로 전락했다. 앞서 여야 5당과 청와대·정부·경제단체·노동조합 등의 참여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음 회의는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올해 정기회의 세부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안을 마련해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진영대결을 멈추고 입법이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

文 대통령 '국경없는기자회' 접견

“가짜뉴스가 공정한 언론 해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들루아르 사무총장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RSF가 그동안 전세계 언론자유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우리나라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RSF 노력 덕분에 정치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본다”며 “우선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RSF가 앞으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노력하겠다”며 “(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자본·제도·허위정보·오보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근거 없는 소문·광고·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며 “전세계가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당정, 형사·공판부 강화... '검찰개혁' 시동

법무·검찰개혁 방안 협의회 실시 조국 사건 종결후 공보준칙 개정 적용

당정(여당·정부)은 18일 검찰 조직 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 검찰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특별수사부(특수부)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먼저 회의 후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적으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보준칙 개정은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장은 다만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진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국회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법률 개정 없이 구성이 가능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설치와 향후 개혁 추진 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임차인의 장기 임차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

던 특혜를 확대한 것이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바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상가 건물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형사절차에서는 국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선변호사는 주로 피고인에게만 제공했다.

/석대성 기자

항공사 5년간 과징금 358억... 제주항공 1위

이용호 의원 “안전불감증 여전”

국토교통부가 국내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근 5년간 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의 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를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총 358억1060만원이다. 위반 행위 발생의 경우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13건에 달

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위반 행위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사업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과징금은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원으로 9개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았다. /석대성 기자